

기업도시, 과대 평가되어 있다

-기업도시 개발의 성공 조건

개념과 유형

기업 주도의 산업·정주 기능을 갖춘 자족형 복합 도시	
목적	기능별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투자 부진 타개 - 지역 경제 활성화 - 국토 균형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교역형: 제조업, 교역 위주 - 지식기반형: 연구개발 위주 - 관광레저형: 관광·레저·문화 위주 - 혁신거점형: 공공기관 지방이전



개발의 문제점

개발 계획 이행과 성공 가능성 불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 지역 개발 명분 위주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목표와 경제성 상충 - 선정 도시의 인구 감소세와 低상주율로 자족도시 건설 어려움 - 유사 목적의 산업·관광 단지와 혁신도시 조성으로 경합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 중복 경쟁 - 낙후 지역 위치와 각종 규제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 여건 미흡, 대기업 및 외자 참여 저조 - 행복도시·혁신도시와의 동시 다발적 대규모 개발로 전국토의 투기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수용난과 자금 조달난으로 사업 시행자의 경영 악화 우려



보완과제

성공적 개발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여건 조성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분보다 실현 가능성 중시: 사업 타당성 결과에 근거 - 중복 과잉투자 방지: 유형 별·도시 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의 우선 순위 조정 - 발상의 전환: 기업도시의 공공재 인식으로 획기적 규제 완화, 광역 지자체와 연계 개발 모색 - 경제성 기반 확충: 총액출자한도 예외 확대 SPC 설립 요건 완화, 토지 수용권 확대, 개발 이익 환수율 완화 등 - 개발 인프라 확충: 광역 물류·교통 인프라망 구축, 영리 법인의 교육·의료 기관의 설립 허용

□ 기업도시, 과대 평가되어 있다

- 기업도시 개발의 성공 조건

1. 기업도시 개념과 유형

○ 기업도시는 기업의 투자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민간 주도로 개발되는 자족적 복합 기능 도시로서, 기능별로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개념과 특징) 기업도시는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와 유사하나, 개발의 주체와 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

·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토지 수용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며, 산업·연구·관광 등의 경제 활동은 물론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 기능을 갖춘 복합자족도시로서, 기업이 개발의 주체인 동시에 수요자임

· 반면,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는 12개 부와 4처 등을 비롯한 정부기관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는 175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추진되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발의 주체임

· 또한 신도시(분당, 일산 등)와 산업 단지(구미, 창원 등)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을 뿐 아니라, 주거 및 생산 기능을 중심으로 도시와 산업 개발이 분리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기업도시와 차이가 존재

- (유형) 기업도시는 기능별로는 산업교역형과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등으로 구분됨

· 관광·레저형이 최소 기준 면적과 시행자의 의무 사용 비율이 가장 크므로 이 부문의 사업 시행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

< 기업도시의 기능별 유형 >

구분	기능	기능 (국내 지정 및 해외 대표 도시)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산업단지	제조업과 교역 위주 (무안 / 日의 도요타市)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혁신클러스터	연구개발 위주(원주, 충주 / 美 실리콘 벨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관광단지	관광·레저·문화 위주(태안, 무주, 영암·해남 / 美 디즈니랜드)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 성장 촉진

주: 4개 유형 중 혁신거점형은 175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개념임

< 유형별 최소 면적 및 시행자 직접 의무 사용 비율 >

구 분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최소 면적	150만 평	100만 평	200만 평	100만 평
주용지 비율	40% 이상	30% 이상	50% 이상	30% 이상
시행자 비율 (전체 면적 대비)	30% 이상 (6%, 9만 평)	20% 이상 (3%, 3만 평)	50% 이상 (12.5%, 25만평)	30% 이상 (4.5%, 4.5만평)
일반 분양 면적률	14%(21만 평)	12%(12만 평)	12.5%(25만 평)	11.5%(11.5만 평)

- 주: 1) 최소 면적은 기업도시로서의 복합 기능과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 허가 기준임
 2) 주용지 비율은 가용 토지(공공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통상 50%) 대비 각 유형별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최소 조성 비율임
 3) 시행자 비율은 주용지 대비 시행자의 직접 의무 사용 토지 비율로 이행하지 않으면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대체 지정됨
 4) 시행자 비율의 ()내와 일반 분양 면적률은 전체 허가 면적 대비 비율임

2. 기업도시 추진 현황과 개발 계획

- (현황) 지난해 8월에 6개 시범 사업 지역이 선정된 이후, 제안 기업들은 금년 말까지 개발 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 선정된 모든 기업도시가 아직은 초기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음
 - 2004년말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제정·공포로 기업도시는 기존의 산업단지나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도시개발법'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이 아닌 독자적인 법·제도를 따름

< 기업도시 추진 절차 >

구 분	추진 절차	심사 내용
구역 지정 및 계획 단계	입지 선정 → 개발 구상 및 기초 조사 → 개발 구역 지정 제안 및 개발 계획 승인 신청 →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	관계 기관 의견 청취와 공청회, 사전 환경성 검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등
시행 단계	실시 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 실시 계획 승인(지구단위 계획 결정) → 공사 시행, 기업체 이전 등 → 공사 준공 검사	보상 협의, 환경·교통·재해 영향 평가, 지자체 및 행정 기관 장과 협의,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등
관리 단계	준공 및 보고, 기업도시 관리	기업도시관리협의회 구성 운영(도시 관리, 기업 입주 등)

- 추진 절차는 크게 ① 구역 지정 및 계획 단계 ② 시행 단계 ③ 관리 단계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은 제1단계 초기의 ‘개발 구상 및 기초 조사 단계’에 머물고 있음
- (개발 계획) 6개 도시에 향후 5~10여 년에 걸쳐 5,200만 평 부지에 총 37조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정부는 6개 시범도시 외에도 기업도시 심사를 통과할 경우 숫자 제한 없이 추가로 허용하겠다는 방침
- 선정된 6개 기업도시는 각 지역별 특색을 살린 자족 복합 기능 도시로 개발하여, 41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각 지역의 경제·문화 중심지로 거듭나게 발전시킬 계획
- 무안 : 산업교역형 시범도시로, 한·중 국제산업단지와 전용 물류기지 건설, 차이나타운 조성 등 적극적인 중국 자본 유치로 통해 산업·물류·휴양의 미래도시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 개발할 계획임

< 선정된 6개 기업도시 현황과 개발 계획 >

구분	주요 내용		규모	완료 시기
무안 (산업교역형)	제안자	무안기업도시개발(주) [16개 업체 + 무안군]	2조 7,400억원	2011
	도입 시설	항공물류, 차세대 제조업단지, 건강보양단지 등	1,220만 평	
충주 (지식기반형)	제안자	포스코건설, 이수화학, 주택공사 등 (5개업체 + 충주시)	3,086억원	2010
	도입 시설	첨단연구단지, 실버타운, 종합레포츠 타운 등	210만 평	
원주 (지식기반형)	제안자	롯데건설, 국민은행 등(4개업체 + 강원도, 원주시)	1,603억원	2015
	도입 시설	첨단연구·의료단지, 바이오 산업단지, 문화컨텐츠산업단지 등	100만 평	
태안 (관광레저형)	제안자	현대건설 + 태안군	2조 357억원	2011
	도입 시설	테마파크, 생태공원, 골프장 등	473만 평	
무주 (관광레저형)	제안자	대한전선 + 무주군	1조 8,000억원	2015
	도입 시설	골프장, 골프스쿨, R&D 시설	245만 평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제안자	국내외 15개업체 + 전라남도	30조원	2016
	도입 시설	테마파크, 마리나, 골프장, 카지노	2,942만 평	
합계			37조 446억 원 5,190만 평	2010~16

자료: 국정홍보처, 건설교통부 보도 자료 등

- 지식기반형의 충주는 IT·BT·NT 중심의 최첨단 부품 소재 산업 도시로, 혁신도시로도 지정된 원주는 첨단 의료 및 바이오 산업의 중추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두 도시 모두 상반기 중 개발 전담기업인 SPC(special purpose corporation : 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할 예정임
- 관광·레저형인 태안과 무주, 영암·해남은 골프·카지노 대학이나, 실버단지 와 연계한 노인 전문·요양 병원, 체육시설과 국제회의장 등을 건설할 계획
- 특히, 태안은 관광·레저대학과 골프장(144홀), 테마파크 건설 등의 8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하여, 연 250만 명의 신규 관광객이 찾는 'U-ECO SMART형 미래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현대건설이 총 투자비(부지 조성 + 직접투자) 2조 357억 원 중 7,150억 원(35.1%)을 조달할 계획임
- U-ECO SMART형 미래 도시란 '유비쿼터스(Ubi-quitous) + 친환경(Ecology) + 창의성과 지성(SMART ; Sport Multi-media Agriculture Retreatment Tourism)을 겸비한 도시를 의미함

3. 기업도시 개발의 문제점과 장애 요인

- 기업도시 건설이 개발 목표와 경제성의 상충, 과다 중복 경쟁, 인프라 기반 여건 미흡, 토지 수용난과 자금 조달난 등으로 사업 이행과 성공적인 분양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지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임
- (개발 목표와 경제성의 상충) 기업도시 선정이 기업의 투자 촉진과 철저한 수요 분석 결과보다는 낙후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에 초점이 맞춰진 듯하여, 일부 도시는 사업 성공을 낙관할 수 없음
 - 원주를 제외한 모든 기업도시는 인구가 감소세에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관광·레저형 도시는 상주 인구 비율이 낮아 자족성과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임
 - 실제로 2000~05년간 인구 증가율은 산업교역형인 무안이 -11.1%, 3개 관광·레저형 도시는 -9.4%로, 6개 기업도시 전체 평균은 -2.9%를 기록

- (과다 중복 경쟁) 선정된 일부 기업도시 주변에는 이미 유사한 목적의 단지가 조성 중에 있어, 이들과의 경합으로 과다 중복 투자 소지가 있음
 - 기 선정된 기업도시는 안정적인 공공 수요가 존재하는 행복도시나 혁신도시는 물론, 과주 LCD와 도요타市 등과 달리 사전적인 자체 개발 수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통한 신규 수요 창출이 사업 성공의 관건임
 - 그러나 기업도시 간의 차별성 부재는 물론, 이미 주변에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유사한 성격의 단지가 조성 중에 있어 사업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 지가 의문시됨
 - 특히, 관광·레저형의 경우 태안은 대단위 퍼블릭 골프 수요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미 기반 시설이 양호한 수도권의 인천 용유·무의도 관광단지(213만 평, 144홀)와 시화 지구(1,680만 평, 180홀)에 대규모 관광·레저타운과 골프장이 건설될 계획이어서 경쟁력이 열세에 있음
 - 또한 1992년에 지정된 해남 화원 관광단지 151만 평도 2011년 완공을 목표로, 50% 이상의 공정률과 2007년의 골프장(27홀) 개장 및 기반시설 완공이 예정되어 있음
 - 이러한 과당 경쟁으로 영암 대불공단은 1997년 준공 이후 10년이 지난 2005년 8월말 현재의 공단 분양률이 50.4%에 불과한 실정임

- (기반 여건 미흡)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하고, 선정 지역 대부분이 산업 및 관광 인프라가 미비한 낙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기반 시설이 미흡
 - 대기업의 참여 저조와 교육·의료 기관 설립에 대한 규제, 기업도시 주변의 광역 인프라망 미비 등으로 외자 유치와 정주 여건이 갖춰진 기업도시로의 발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임

- (토지 수용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총 2억 평이 넘는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으로 지가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토지 확보에 엄청난 비용 소요와 사업 지체가 우려됨
 - 행복도시·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도시를 포함한 4개 개발 지역의 총 면적은 2억 2,500만 평으로, 이는 분당 신도시의 10.7배로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면 약 33배에 달함
 - 4개 부문 모두 2007년 착공 예정의 동시 집중 개발 사업으로, 계획 발표 이후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

- *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2005~2006. 3월의 무주 지가 상승률은 전북 평균 1.7%의 9.3배인 16.3%에 달함
 - 특히 개발이 본격화되면 토지 보상금 지급으로 인근 대체 토지의 수요 증가와 주변 지가 상승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
 - * 원주는 대상 부지 100만 평 가운데 사유지가 91%를 차지함
- (자금 조달난) 대규모 투자 자본과 장시간이 요구되는 데 반해,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초기에는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임
- 향후 5~10년간 기업도시 건설에 투입될 총 공사비를 연평균 개념으로 보면 연 평균 투자비 4조 2,500억 원으로, 이는 2005년 GDP 민간건설 부분의 10.6%를 차지(민간 토목 건설 부분의 36.8% 차지)
 - 이에 따라 특별법에는 기업의 용이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과 토지 소유자 동의 하의 토지 상환 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통상적으로 기반 시설투자 비용보다는 설비투자 비용이 많고, 토지 소유자들이 현금 보상을 선호하므로 사업 실행에는 당초 예상보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
 - 또한 사업의 불확실성과 초기 투자 비중이 높아, 초기 분양률이 저조하고 외자 유치와 자금 회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건설업 중심의 시행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 2004년말 현재, 건설업 부채율 166%로 제조업 104%보다 높은 수준임
- (사업 이행 불투명) 토지 수용난과 자본 조달난, 분양 차질 등으로 개발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될 지가 불투명함
- 유사 도시와의 동시 다발적인 추진으로 전국토가 투기장화 됨으로써, 지가 상승과 부지 수용 부담 → 高價 분양 불가피로 분양 차질 우려 → 시행 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경영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토지 수용난과 高지가 부담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참여정부 말기로 잡혀있는 착공 시점과 맞물려 있어,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새정부 출범으로 계획의 전면 수정(축소 및 중단)이 불가피해질 수 있음

- 이는 시행 기업의 심각한 경영 악화와 여타 부문의 투자 여력 축소를 야기함으로써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당초 취지가 크게 손상될 수 있음
- 더욱이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의 양극화로 지방은 APT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 특별법에는 정주 기반 조성을 위해 가용용지의 10~15% 이상을 주거용지로 확보토록 규정
- 특히, 체류형이 아닌 방문객 위주의 관광 단지가 조성될 경우에는 인프라 및 편의 시설의 외자 유치에 어려워, 분양과 정주기능의 자족 도시 건설에도 심각한 차질이 예상됨

4. 기업도시의 성공적 개발 과제

○ 기업도시 개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발전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시급함

- (실현 가능성 중시) 낙후 지역 개발과 국토 균형 발전 목표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실현 및 성공 가능성을 중시하여 추진
 - 기업도시는 당초 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투자 부진 타개와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제안된 것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은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과실임
 - 따라서 균형 발전의 명분 중시와 동시 다발적인 무리한 투자로 사업 중단과 난개발을 초래하기보다는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여 견실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함
 - 국내 대기업의 참여가 외국 기업의 진출 여부 판단의 중요한 한 기준이 되므로, 재무적 안정성과 사업 능력이 인정되는 대기업의 참여 유도로 해당 사업의 성공과 외자 유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중복 과잉 투자 방지) 유사한 목적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유형별·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의 우선 순위 조정이 필요함
 - 지자체는 단기 성과를 노린 지나친 유치 경쟁보다는 지역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의 접근과 지역 주민의 협조 유도 노력이 요구됨

- 또한, 투자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해 공기업의 참여 유도과 다양한 개발 펀드 허용과 국민주 발행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개발 인프라 확충) 선정된 기업도시 대부분이 낙후 지역인 만큼, 기업하기 좋고 살고 싶은 정주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인근 지역과의 원활한 도로·교통·통신망 확충을 통해 기업도시 내부는 물론, 해당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광역 인프라망 구축이 필요함
 - 또한, 기업도시가 쾌적한 정주 기능을 갖춘 자족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의료·문화 서비스 부문의 확충이 매우 중요함
 - 이를 위해 영리 법인의 교육·의료 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허용하고, 기업도시 내 우수 외국계 중고등학교 유치 노력이 요구됨
- (경제성 기반 확충) 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 적정 이익 보호 등 재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통한 참여 유도 방안을 모색
 - 기반시설 투자는 물론 설비투자 비용의 총액출자한도 예외 규정 인정과 토지 수용권 확대, 건설 개발 사업자에 대한 SPC(특수목적법인) 허용, 기업의 직접 토지 사용 의무 비율과 개발 이익 환수율 완화, 산업 평화 보장을 위한 최소 장치 마련 등 특별법의 보완이 필요함
- (발상의 전환) 기업도시는 개발의 일반모형이 아니라 선도적인 특수모형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규제 자유 지역' 개념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됨
 - 기업 시행자의 직접 사용 토지 비율은 3~12.5%에 불과할 뿐 아니라 개발 이익 환수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업도시 건설은 민간의 영리 사업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공적 역할의 수행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 또한, 기업도시가 속해 있는 해당 지자체는 물론, 인근의 광역 지자체와도 연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홍순직 수석연구위원(3669-4182, sjhong@hri.co.kr)

< 별첨 > 일본의 대규모 관광 개발의 명암 ¹⁾

○ 일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지방의 신성장 동력 육성 명분으로 리조트 개발을 적극 개발했으나, 실패하였음

- 1987년 綜合保養地域整備法(일명 리조트법) 제정을 계기로 전국적인 리조트와 골프장 개발붐이 조성 (1987. 6~1991. 12, 35개 지역 540ha 개발 인가)
- 그러나, 경제성과 관광 잠재력에 대한 분석 없이 정치 논리에 의한 개발 착수로 실패
- 결국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된 일부 리조트 개발의 실패는 국가 및 지역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

○ 실패 사례

① 하우스텐보스(Huisten Bosch : 숲속의 집)

- 1989년 '일본 속의 네덜란드'(나가사키 Exotic Resort 구상)를 기본 테마로 총 46만 평 부지에 2,500억 엔을 투자하여 1992년 개장
- 개창 초기에는 인기를 끌었으나 1996년부터 입장객이 급감하면서, 무리한 초기 투자에 따른 부채 부담으로 2003년 2월 도산 (총부채 2,200억 엔)

② 씨가이아(Sea Gaia)

- 미야자키현의 씨가이아는 '관광 미야자키 부활'을 목표로 골프장, 쇼핑센터, 동물원 등을 갖춘 대규모 리조트로 총 2,000억 엔을 투자하여 1994년 개장
- 안이한 경영 계획과 무리한 투자로 개장 7년만에 부도: 입장객이 개장 다음 해인 1995년의 125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당초 250만 명 예상)
- 2001년, 투자액의 10%도 안되는 162억 엔에 미국계 리플우드 홀딩사에 인수

③ 골프장

- 골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도산 속출
- 골프장 내장객 수는 1992년 1억 명에서 2003년 8,842만 명으로 13.6% 감소한 반면, 골프장 수는 동 기간 중 2,028개에서 2,458개로 21.2% 증가

1) 강신겸 외, 『동북아 관광지도와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2005. 8.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투자 부진으로 성장 지속력 약화 우려

○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6.2%로 작년 4/4분기의 5.3%보다 0.9%p 상승함 (계절조정을 감안한 전기대비 성장률은 같은 기간 1.6%에서 1.3%로 오히려 0.3%p 하락)

소비와 서비스업 호조, 투자와 제조업 부진의 불균형 성장

- 이번 경제성장률의 상승은 전년동기인 2005년 1/4분기의 2.7%에 대한 통계적 착시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됨
- 경제활동별(전기대비 기준)로는 제조업이 0.9% 증가에 그쳤으나, 서비스업(1.2%)과 농림어업(2.9%)이 호조를 나타냄

- 지출 항목별(전기대비 기준)로는 민간소비가 1.2%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설비투자과 건설투자 증가율이 각각 -0.7% 및 -0.3%의 부진한 모습을 나타냄

투자 회복 없이는 성장 지속력 확보 불가능

-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최근의 경기 회복세 약화,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감이 높아짐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4	2005				2006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3월	
경기	경제성장률	4.7	4.0	2.7(0.5)	3.2(1.4)	4.5(1.6)	5.3(1.6)	-	-	6.2(1.3)	
	수요	소비재판매	-0.8	3.9	1.2	3.4	4.4	6.8	8.7	0.9	4.8
		설비투자추계	1.4	3.2	3.9	1.4	1.1	7.0	0.1	2.4	10.3
		건설수주	-3.9	9.5	22.3	38.5	15.8	-17.9	10.9	22.2	-34.5
		수출	31.0	12.0	12.7	9.0	15.4	11.4	3.6	16.8	12.9
	공급	산업생산	10.2	6.3	3.5	3.5	7.1	10.3	6.9	20.6	10.0
		취업자수(만명)	2,256	2,286	2,225	2,313	2,303	2,303	2,247	2,241	2,285
		실업률(%)	3.7	3.7	4.2	3.7	3.6	3.5	3.7	4.1	3.9
수입		25.5	16.4	14.8	15.2	21.1	14.6	17.3	27.2	13.0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282	166	59	26	27	54	1	-8	-4	
	무역수지(억\$)	294	232	62	60	49	61	5	4	13	
물가	소비자물가	3.6	3.2	3.2	3.0	2.3	2.5	2.8	2.3	2.0	
	생활물가	4.9	4.1	4.7	4.5	3.4	3.4	3.8	3.3	2.6	

주 : 경제성장률 ()안은 전기대비 계절조정 증기율이며,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통계 지표임

□ 금융 동향 : 엔/달러 환율 대폭 하락

○ (해외 금융시장)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절상 압력 증대

- G7 성명서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유연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엔화 대폭 강세
- 금리: 4월 소비자신뢰지수 예상치 상회(107.5→109.6, 예상: 106.2) 등에도 불구하고 고유가로 인한 소비둔화 전망 등으로 소폭 하락 (미국채 10년물: 4.91%→4.87%)
 - 환율: G7 성명서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유연성 확대를 촉구함에 따라 엔화 대폭 강세 (\$/€ : 1.2341→1.2530, ¥/\$: 116.58→114.17)

○ (국내 금융시장) 글로벌 달러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 지속

- 엔/달러 환율 급락 등 글로벌 달러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 지속
- 주가: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주가 전망 등으로 보합 (1,451.3→1,452.5)
 - 금리: 원화 환율 급락을 막기 위한 5월 콜금리 동결 가능성, 미국 금리 하락 등으로 소폭 하락 (국고채 3년 수익률, 4.91%→4.87%)
 - 환율: 정책 당국의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엔/달러 급락 등으로 하락세 지속 (전주 말 948.6→944.9)

○ (전망)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 증대로 원화 환율 하락 예상

< 주요 금융 지표 >

		2004	2005				2006		
			1/4	2/4	3/4	4/4	1/4	4.21	4.27
국내	거래소 주가	895.9	965.7	1,008.2	1,221.0	1,379.4	1,359.6	1,451.3	1,452.5
	국고채3년(%)	3.28	3.91	4.02	4.60	5.08	4.93	4.91	4.87
	원/달러	1,035.1	1,015.5	1,025.4	1,041.1	1,011.6	971.6	948.6	944.9
해외	DOW	10,783	10,504	10,275	10,569	10,718	11,109	11,348	11,383
	Nikkei	11,489	11,669	11,584	13,574	16,111	17,060	17,404	17,115
	미국채10년(%)	4.22	4.48	3.91	4.32	4.39	4.85	5.01	5.07
	일국채10년(%)	1.44	1.33	1.17	1.48	1.48	1.78	1.92	1.98
	달러/유로	1.3556	1.2964	1.2108	1.2026	1.1849	1.2118	1.2341	1.2530
	엔/달러	102.56	107.15	110.92	113.51	117.75	117.78	116.58	114.17
	두바이(\$/배럴)	33.11	45.91	52.09	56.32	53.19	59.16	65.84	65.86